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조치 운동 펼친다

99.1.22
내부신보

정대협, 일본 국민기금 비밀 지급에 항의

일본 '국민기금'이 정신대 할머니 5명에게 몰래 지원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13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성봉희)와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에 나섰다.

정대협은 △기금을 통한 매수 공작을 백지화하고 공개 사과할 것, △전후청산을 위한 관계법을 제정하고 정부차원의 배상을 할 것,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없는 일본 외상의 방한 반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등을 요구하고 15일 일본대사관 앞 규탄집회를 비롯해 일본 외상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 반대활동, 일본전범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 운동, 2월27일 로젠 바움 미 법무부 전쟁범죄 특별조사관 등 초청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직 돈을 받은 할머니들의 명단을 모르고 있다.

일본 '국민기금' 관계자는 지난 16일과 24일 보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고 7명외에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대협 측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의 숫자는 159명인데 이 명단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다. 정대협조차도 활동에 참여하는 60여명의 할머니외에는 누가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일본 국민기금 측에서 여러명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할머니들을 이간질 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기금을 받은 사람들도 이를 주도한 모 할머니가 소개한 사람들이다.

김복순 할머니에 따르면 일본 국민기금의 우스키 게이코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신대 할머니들과 접촉을 시도하다 12월16일 용산역에서 할머니들을 만나 도장을 받았다 한다. "정대협에서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며 다그쳤다고 한다.

비밀리에 기금을 준 것이 밝혀지자 생존자 할머니들은 분노한다.

심미자 할머니는 "일본은 허울 좋게 국민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춘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유감

을 표시하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이수성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13일 여성단체연합과 만나자고 제안했다.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몇몇 할머니들이지만 이들이 국민기금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적었던 탓도 있다"며 정신대 할머니들 위로에 기업과 정치인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지 대표는 "정부는 올해 생활안정금을 25만원에서 50만원을 올려 나름 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며 "경제적인 지원보다 일본정부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을 부탁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30억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2억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었으나 기업과 정당의 참여는 미미하다.

이번에 할머니들이 받은 돈은 5백만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백만엔은 의료비와 주택관리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위로금은 2백만엔이다.

〈이현숙 기자〉